

제 I 부

---

자본주의 시스템의 존립 근거



## 제1장

---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과제와 방법
 

---

## 들어가며

이번 장에서는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중심 과제와 방법을 파악한다. 그 때의 열쇠는 주저를 이루는 『자본』 및 그 관련 초고들이다. 이것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집필된 것으로, 그 이론이 응축되어 있다. 『자본』의 부제가 ‘경제학 비판’이라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로부터 마르크스와 고전파, 나아가 현재의 주류 경제학과와의 본질적 차이를 읽어낼 수도 있다. 물론 그는 『자본』뿐 아니라 좁은 의미의 경제학에 머물지 않는 장대한 발췌노트도 남겼다. 하지만 본인→그의 최대의 연구 과제에 꼽으라면, 그것은 경제학이며, 중심은 『자본』의 완성에 있었다. 마르크스는 그 집필에 전력을 쏟았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자본』 제1부 초판 원고를 입고한 직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줄곧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다... 작업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내 저작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해야 했다. 이 저작을 위해 나는 건강도, 인생의 행복도, 가족도 희생해 온 것이다. ... 만약 사람이 소와 같은 것이 되고 싶다면, 물론 인류

의 고통 따위는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만약 내 책을 적어도 원고의 형태로라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정말 나를 비실천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MEW 31, S. 542)<sup>1)</sup>

마르크스는 “작업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자본』의 완성을 위해 소비했다. 『자본』 2부와 3부는 자신의 손으로 펴내지는 못했지만, 말년의 1881년(『자본』 2부 8고의 집필)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인류의 고통’을 직시하고 ‘건강도 인생의 행복도 가족도 희생하면서까지 그 완성에 매진했다. 물론 그는 초기뿐만 아니라 후기에도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 발췌 노트를 작성했지만 『자본』을 상대화하고 중심 테마를 다른 방면으로 이동시킨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은 초고들뿐만 아니라 서한 등에서도 명백하다. 예를 들어, 말년인 1881년 12월 7일의 (룽게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는 “『자본』 1권의 새로운 제3권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마이스너의 소식을 나는 오히려 불쾌하게 느꼈을 정도다. 나는 아무래도 내 시간의 전부를 — 내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자마자 — 오로지 2권[2부와 3부의 완성에 쓰고 싶었다”(MEW 35, S. 243)라고 썼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다니엘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최대한 빨리 제2권[앞의 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설령 그것이 외국에서 출판되더라도)”(MEW 35, S. 245-246)라고 말하며, 그 출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발췌노트의 연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을 일반화하여 마치 그것이 핵심인

---

1) 마르크스가 마이어에게 보낸 편지(1867년 4월 30일).

것처럼 ‘새로운’ 성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전부터 ‘초기 연구’나 ‘말년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자본』 전 3부의 경제학 연구를 중심으로 두지 않고서는 마르크스의 핵심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셈이다.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으로 2012년에 『자본』 및 그 관련 초고들, 즉 MEGA 제1부분 “『자본론』과 그 준비노작”의 간행이 모두 완결되었다는 것이 있다. 1975년 간행이 시작된 이래로, 그것은 실로 37년이나 되는 세월에 걸친 일이었다. 바야흐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전모를 읽어낼 여건이 마련됐다.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차 그 경제이론의 과제와 방법을 파악한다.

## 1. 『자본』의 주제와 연구 영역

### 1.1 마르크스의 경제학 연구로의 걸음 : 철학과의 결별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독자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자기 식의 독법으로 대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는 “『자본』을 철학자로서 읽는다”, “『자본』의 철학적 읽기 방식”을 제창한다(Althusser et al. 1965[2014]: 4-5/14-15). 경제학 분야에서도 각각이 속한 학파의 기준에 비추어 『자본』을 읽고자 한다. 거기에는 『자본』에 선행하는 지침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저작도 우선 저자가 — 본서의 경우 마르크스가 — 무엇을 문제로 삼고 그것을 어떻게 밝혀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연구의 출발점에 설 수 없다. 이 이해가 흔들리면 엉뚱한 ‘마르크스 비판’이나 ‘보물찾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먼저 마르크스가 『자본』을 집필하게 된 경위를 일별하자.

그는 『경제학 비판』의 「서언」에서 “나 자신의 경제학 연구 개요”(MEGA II/2, S. 99), “경제학의 분야에서의 나의 연구의 발걸음”(MEGA 1172, S.102)를 되돌아보고 있다.

마르크스는 학생시절과 학위 취득 후 몇 년 동안, 헤겔 철학에서 가장 강한 영향을 받았다.<sup>2)</sup> 브루노 바우어(Bruno Bauer 1809-1882)나 아놀드 루게(Arnold Ruge 1802-1880) 등 헤겔 좌파, 그 중에서도 포이어바흐(Ludwig Andreas Feuerbach 1804-1872)의 철학에는 크게 심취한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라인신문》의 기고자·편집자로서의 업무를 하면서 목재 절도 단속법,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둘러싼 논쟁 등 다양한 경제문제를 언급해야 했다. 그리하여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큰 계기가 되어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연구[철학]로는, …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라인 신문》의 편집자를 사임하고, “공적 무대에서 서재로 물러나게 되었다”(MEGA II/2, S.100). 이 이후, 경제학 연구가 시작되어 갔다.

그 연구를 본격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845년부터 1846년에 엥겔스와 공동 집필한 『독일 이데올로기』였다.<sup>3)</sup> 그들은 이 작업 속에서 ‘새로운 유물론’과 그것에 근거한 역사 과학을 확립하고, “철학적 의식을 청산”(MEGA II/2, S.102)하기에 이른다. 마르크스가 28살 일 때다. 그는 이후 철학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부르주아 사회[자본

---

2) 마르크스가 청년기, 본과 베를린에서 어떤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지적 경험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하인리히(Heinrich 2019)가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3)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MEGA판 『독일 이데올로기』(MEGA I/5)의 출간과 더불어 그 연구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주의 사회]의 해부학은 경제학 안에서 찾아야 한다”(MEGA II/2, S.100)라는 것을 확신하고 경제학 연구에 매진했다.

무엇보다 『독일 이데올로기』를 집필하기 전의 마르크스는 철학적 용어와 서술을 많이 사용했다. 《독불연보》나 『신성가족』을 봐도 독일 철학, 특히 포이어바흐의 영향이 강하게 남겨져 있다. 그런데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면서 철학적 범주에서 급속히 탈피한다. 다소의 철학적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철학적 표현을 아직도 잠시 유지한다면”(MEGA I/5, S.337)이라든가 “철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MEGA I/5, S.37)이라로 한정하고 철학적 표현으로 현실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제학 비판 요강』에서도 “개념 규정이나 이러한 개념들의 변증법만이 문제인 것 같은 외관을 산출하는 관념론적 서술방식을 정정하는 것”(MEGA II/1.1, S.85)을 강하게 자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에서도 철학적인 문제 설정이나 표현은 기본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이데올로기』 이후, 마르크스는 파리와 브뤼셀을 거쳐 런던을 거점으로 경제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나의 경제학 연구는 중단되었다가 185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런던에서 다시 착수할 수 있었다. 대영박물관에 퇴적되어 있는 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방대한 자료, 부르주아 사회의 관찰에 대해 런던이 가지는 유리한 위치… 이러한 것들 덕분에 나는 완전히 처음부터 [경제학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자료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MEGA II/2, S.102). 그 최종적인 성과가 『자본』이었다.

## 1.2 『자본』의 주제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경제 법칙의 해명 그렇다면 『자본』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 1부 초판 「서문」을 보자.

이 저작『자본』에서 내가 연구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에 대응하는 **생산관계들** 및 **교역관계들**이다. …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법칙으로부터 생기는 사회적 적대관계의 발전도의 높고 낮음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칙 자체**, 철의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고 자신을 관통하는 이 **경향**이 문제인 것이다. … 한 사회가 **자기의 운동의 자연법칙**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 그리고 **현대(modern)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파헤치는=폭로하는** 것이 이 저작의 **최종 목적**이다 —, 그 사회는 자연적 발전의 단계들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법령으로 제거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출산의 고통을 단축하고 완화시킬 수는 있다. (MEGA II/5, S.12-14[12-16])

『자본』의 연구과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에 대응하는 생산관계들 및 교역관계들”, “이 법칙 자체, 철의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하고 자신을 관통하는 이 경향”에 있다. “이 저작의 최종 목적”은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파헤치는=폭로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저작에서 오늘날에도 존속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경제법칙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경제법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법칙’이라고 하면 중력(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자연과학적 법칙을 연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칙이란,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의 배후에 관통하는 본질적인 관계들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단순한 사실이나 경제현상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내면=심층에 있는 본질적인 관계들을 포착=과악하여 그 현상이 왜,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를 밝힌다. 구체적인 현상은 법칙의 과악에 바탕을 두어야 비로소 포착할 수 있고 과학적 분석은 바로 그런 방법이다.

다만 법칙 내지 본질이 나타나는 방식=본질의 현상 방식은 조건들에 따라 다르다. 법칙과 현상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따금씩 변하는 경제현상에 사로잡혀 그 내적 관련(본질적 관계들)을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는 말한다.

여기『자본』 제3부에서는 속물이나 속류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즉, 그것은 그들의 두뇌 속에서는 항상 단지 관계들의 직접적인 현상 형태가 반사될 뿐, 관계들의 내적인 관련이 반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 내적인 관련이 반사된다면 도대체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MEW 31, S.313)<sup>4)</sup>

속류 경제학자들은 내적 관련의 폭로에 대해 현상면에서는 사태가 다르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마치 대발견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한 듯이 이야기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가상에 집착하여=매달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

4)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1867년 6월 27일).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과학이 있는  
것일까?(MEW 32, S.553)<sup>5)</sup>

마르크스는 『자본』 3부에서도 “만약 사물의 현상 형태와 그 본질이 일치한다면 모든 과학이 불필요하다”(MEGA II/4.2, S.721)라고 강조했다. 정말로 법칙을 관통하는 ‘경향’이라고 하듯이=과 같이 법칙에 반대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법칙과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있다. 예를 들면, 본서 제7장에서 들어갈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고 할 때도, 이윤율의 저하에 반대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으면, 이윤율은 상승하기도 한다. 그런 한에서, 중력의 법칙 같은 자연과학의 법칙도 공통적이다.<sup>6)</sup> “현상에서는 사물이 전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은 경제학 이외에서는 어느 과학에서나 상당히 잘 알려진 것이다”(MEGA II/6, S.500[559]).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비행기는 일시적으로 날 수 있다. 그러나 비행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법칙이 부정되거나 ‘변질’ 또는 ‘왜곡’된다고 해서 비행 중에는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행 현상을 이해하려면 중력의 법칙의 과학이 필수다=불가결하다.

경제법칙의 경우에도 그런 한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설령 법칙 그대로의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법칙을 부정하거나 곧장

---

5) 마르크스가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1868년 7월 11일).

6) 다만 경제적 운동법칙과 자연법칙 사이의 본질적 차이에는 유의해야 한다. 경제적 운동 법칙 자연법칙과는 달리 의식을 가진 인간의 특정한 의지나 행위에 의해서만 생산·재생산된다.

자본주의의 ‘변질’이나 ‘구조전환’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전도되어 나타나는지, 법칙에 반대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거꾸로 ‘변질’이나 ‘구조전환’을 주장하고 싶다면 현상 면에서가 아니라 어떤 ‘질’이나 ‘경제법칙’이 변화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법칙에 근거하여 경제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마르크스가 법칙의 규명에 매달리는=집착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자본』에는 가치법칙이나 유통필요 화폐량의 법칙,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등 여러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가끔의 단편적 현상이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칙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왜 마르크스는 평생에 걸쳐 “현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파헤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을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 메커니즘이나 이 사회의 모순을 단순히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이 파악을 통해 “그 사회는 자연적 발전의 단계들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법령으로 제거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 (어소시에이션)를 낳을 때의 “출산의 고통을 단축하고 완화시킬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인데, 어머니가 몸속에 잉태한 태아를 낳을 때 진통으로 ‘고통’을 수반하듯이, 자본주의가 새로운 사회를 산출할 때에도, 사람들의 다양한 주체적인 대처가=노력이=씨름이 필요하다. 이때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특정하고 이를 깊이 이해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다음 사회로 나아가는 지침을 얻을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을 통해 현존 사회의 모순과 함께 어디에 새로운 사회의 모멘트가 있는지 자각적으로 파악하

려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어소시에이션을 낳는 주체의 형성을 촉구하고, “[새로운 사회의] 출산의 고통을 단축하고 완화”하려고 한 것이다.

### 1.3 『자본』의 연구 영역 : ‘자본의 일반적 연구·분석’

『자본』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의 연구 영역과 이 외부에 남아 있는 영역을 준별하는 것이다. 연구 영역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면 다양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자본』의 연구 영역을 둘러싸고는 ‘플랜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논쟁이 벌어진 당시 MEGA는 일부분만 간행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이미 출간된 MEGA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경제학 비판 요강』부터 『자본』까지의 연구 영역의 변천을 추적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마르크스는 당초 『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자본·토지소유·임노동·국가·외국무역(국제무역)·세계시장 등 총 6부로 구성된 플랜을 구상했다. 그 중 제1부 ‘자본’은 자본 일반·경쟁·신용·주식 자본의 4편으로 나뉘었다. 1859년에 출판된 『경제학 비판. 제1분책』은 제1부 「자본」 제1편 「자본일반」에 포함된 제1장 「상품」과 제2장 「화폐 또는 단순유통」만을 포함하는 저작이며, 그 후속을 쓰는 작업은 1861년부터 186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런데 大谷(2016: 제1권 序章B, 補章1)가 밝혔듯이 마르크스는 『1861-1863년 초고』를 통해 ‘자본 일반’을 집필하면서 6부작 플랜을 크게 변경하게 된다. 특히 당초의 플랜에서 ‘자본 일반’의 ‘일반’이란 대상을 엄격하게 ‘일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

래서 그 체계 하에서는 ‘자본 일반’에 대해 ‘특수적 자본’이나 ‘개별적 자본’은 사상 捨象되어 있었고, ‘다수의 자본’에 의한 ‘경쟁’에 대해서도 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 편篇에서는 평균 이윤율의 형성이나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환轉化을 문제로 하기 때문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 이윤율을 달리하는 개별적 자본들의 부문간 이동이나 ‘경쟁’을 다루지 않을 수 없으며, ‘다수의 자본’을 논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서도 크기가 다른 개별적 자본들의 ‘경쟁전’을 거론하지=다루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칙과도 관련이 있는 ‘신용’에 대해서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일반’의 틀 안에서는 ‘경쟁’이나 ‘신용’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없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자본 일반’이라는 대상에 대한 엄격한 한정을, 따라서 6부작 플랜의 틀을 없애도록 강제된 것이다. 이 변화는 MEGA를 확인해도 1863년 이후에 ‘자본 일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에서 연구 영역은 어떻게 새롭게 쇄신되었을까? 결론을 선택하자=미리 말해두자. 마르크스는 여기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연구(die allgemeine Untersuchung der capitalistischen Production)’(MEGA II/4.2, S. 215), ‘자본의 일반적 분석(die allgemeine Analyse des Capitals)’(MEGA II/4.2, S. 305)을 행한다고 말했다. 『자본』 3부 주요 초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마찰 연구(Untersuchung)는 … 특수 연구(Spezialuntersuchung)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마찰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연구에 있어서는 우연적인 비본

질적인 것으로 제거되어야(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제나 현실의 관계들은 그러한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며, 또는 동일하지만 현실의 관계들은 단지 그것들 자체의 일반적인 유형=틀을 표현하고 있는(나타내고 있는) 한에서만 서술되는 것이다.(MEGA II/4.2, S. 215)

6부작 플랜에서는, ‘대상’이 되는 자본을 ‘특수적 자본’ 및 ‘개별적 자본’에 대치=대립=대비시켜 ‘자본 일반’으로 한정했다. 이에 비해 『자본』에서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구·분석’이 일반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연구·자본의 일반적 분석”(이하 자본의 일반적 연구·분석으로 약칭)에 대치=대립=대비되는 것은 ‘특수연구·특수적 분석’, ‘개별연구·개별적 분석’이다. 그래서 “일반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제나 현실의 관계들은 그러한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며, 또는 동일하지만 현실의 관계들은 단지 그것들 자체의 일반적인 유형=틀을 표현하고(나타내고) 있는 한에서만 서술된다”고 하고, 이에 비해 ‘특수 연구’가 외부에 남겨져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의 일반적 연구·분석”인 『자본』에서는 과거의 ‘자본 일반’의 틀 안에서는 도외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수적 자본’이나 ‘개별적 자본’, ‘경쟁’이나 ‘신용’을 포함하여 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경쟁’은 고찰되는 것이 아니며, “제2권『자본론』 제2부·제3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토지소유도 분석하고, 경쟁은 다른 주제들의 취급이 필요로 하는 한에서만 분석된다”(MEW 32, S.539).<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들의 취급이 필요로 하는 한”에서는

분석 영역에 포함되며, 『자본』 3부에서는 “사회의 표면에서, 생산 당사자들 자신의 일상적 의식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본의 상호 행동=작용인 경쟁 속에서 생길 때의 형태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MEGA II/4.2, S. 7)는 것이 된다. 그래서 MEGA의 제3부 제2편 초고3(현행판 제2편 제10장)에서는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를 위한 경쟁. 시장가격과 시장가치. 초과이윤”이 신설되었다=마련됐다. 제3부 제3편 초고(현행판 제3편)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서도 공황을 매개하는 자본들 사이의 ‘경쟁전’에 중요한 위치가 설정되었다(본서 제7장 참조). 또한 제3부 제5편 초고 「5」 신용. 가공자본」(현행판 제5편 제25장~제35장)에서는 ‘신용’이 대대적으로 편입되었다(본서 제8장 참조). 이것에 의해서 신용제도 하에서 구체적인 자태를 취하는 화폐자본·가공자본의 운동이 일대 테마로서 도입된 것이다.

무엇보다 6부작 플랜에서는 별도의 부(部)에서만 논의할 수 있었던 ‘임노동’과 ‘토지소유’도 『자본』에서는 제1부 제2판 제6편 ‘노동=勞賃=임금’과 제3부 제7편 초고(현행판 7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전화」 속에 상당 부분 도입되고, 최종적으로는 ‘노동-노임’, ‘자본-이자’, ‘토지-지대’라는 ‘삼위일체적 정식’을 총괄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또 6부작 플랜의 후반부 3부(국가·외국무역·세계시장)의 내용도 전반부 3부(자본·토지소유·임노동)에 비하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주제를 밝히는 데 필요한 한에서 논급되었다.

이리하여 『자본』에서의 “자본의 일반적 연구·분석”에서는 과거의

---

7) 마르크스가 쿠젤만에게 보낸 서한(1868년 3월 6일)

플랜의 ‘자본 일반’이라는 엄격한 제한이 제거되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경제법칙 내지 본질적 관계들의 규명을 토대로 하여 ‘경쟁’이나 ‘신용’ 뿐만 아니라, 6부작 플랜에서는 다른 부에 속해 있던 내용도 필요한 한에서 도입하면서, “자본들의 현실적 운동”, “구체적 형태들”(MEGA II/4.2, S.7)도 전개하는 “하나의 예술적 체계”(MEW 31, S.132)로 채신된 것이다.

#### 1.4 연구 영역을 준별하는 것의 중요성

##### : ‘자본의 일반적 연구·분석’과 ‘특수 연구’

그 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에서의 ‘자본의 일반적 연구·분석’과 그 외부에 있는 ‘특수 연구’ 사이의 구별이다. 양자를 각각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자본』뿐 아니라 ‘후기·말기 마르크스 연구’에도 혼란을 초래한다.

실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발췌 노트나 서한을 이용한 후기·말기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고를 읽을 수 있다. 거기에서는 우선, (1) 『자본』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자본』에는 직접 쓰여져 있지 않고 발췌 노트나 서한에는 있는 ‘공동체’ 등의 기술에서 ‘새로움’을 찾아낸다. (2) 그 위에서 이 내용을 일반화·정식화하고, 사실 마르크스는 말기에 역사관이나 변혁 구상을 대전환시켰다—마르크스는 말기, ‘농경 공동체’가 “자본에 대한 저항 지점”(Anderson 2010 : 212/316)<sup>8)</sup>이 된다는 새로운 테제를 세우고, 단선적 역사관에서 복선

---

8) 앤더슨(Anderson 2010)은 “1880년대 러시아 농촌 공동체를 자본에 대한 잠재적 저항 원천으로 마르크스가 간주하게 되었다”(ibid.: 224/330)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를 “자본에 대한 저항 지점”(ibid.: 212/316)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



적 역사관으로,<sup>9)</sup> 나아가 ‘경제성장’에서 ‘탈성장’으로 사고방식을 일변시켰다<sup>10)</sup> 등등 — 고 파악한다. (3) 마지막으로 이 변이가 반영되지 않은 『자본』은 역사관의 재정립이나 이론적 틀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미완’의 책이라고 자리매김한다.

여기서 주축이 되어야 할 『자본』은 결합이 있는 것으로서 뒤로 밀려나고, ‘후기·말기 연구’의 중심이 발췌 노트·서한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회로가 형성되는 하나의 요인이 『자본』과 그 외부에 있는 연구 영역 사이의 구별 인식의 결여이다.

하나만 구체적으로 거론하자. 종종 ‘마르크스의 말기 연구’로서 중시되는 것은 「베라 자수리치에게 보낸 서한」(1881년 3월 8일)과 그 세 가지 준비 초고이다. 이 문서들의 내용은 당시 러시아에서 광범위하게 남아 있던 농경공동체도, 서유럽과 똑같은 ‘역사적 숙명’을 뒤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더 고차적인 사회(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가라는 자수리치의 물음에 대한 마르크스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자신은 러시아의 공동체는 토지의 공동소유와 개별적 가족의 가옥이나 저택 등의 사적소유를 **검비한=합치는** 그 “이중성이 이 공동체에 강인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다”(MEGA 1/25, S. 237)라고 말했지만, 그것에 이어서 “그러나 이 똑같은 이중성이 … 분해의 하나의 **맹아기=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분명하다”며 “외부에서 오는 모든 유해한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공동체는 그 자신의 태내에 해로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MEGA 1/25, S. 237)라고 논하며, 공동체가 “자본에 대한 저항 지점”이라고 일반화·정식화하지는 않았다.

9) 샨닌(Shanin 1983)과 앤더슨(Anderson 2010) 등은 마르크스가 말기에 단선적 역사관에서 복선적 역사관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차토파디아이(Chattopadhyay 2016: Chap.10)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10) 이 점에 대해서는 본서 제9장의 주6에서 다시 논한다.

마르크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러시아의 농경 공동체는 서유럽에서 확립된 “자본주의적 생산과 동시에 존재한다”(MEGA I/25, S. 220)라는 독자적인 ‘역사적 환경’·‘역사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긍정적인 성과를 모두 우리의 것”(id.)으로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가진 “강인한 생명”(MEGA I/25, S. 237)을 토대로=바탕으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도 더 고차적인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가 고립되어 있었다면, 만약 일련의 서유럽이 … 긴 일련의 발전을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획득한 경제적 성과들을 러시아가 자력으로 만들어 내야 했다면, 러시아의 공동 사회가 러시아의 사회의 진보적 발전과 더불어 숙명적으로 사멸해야 할 운명에 있다는 것은 … 한 점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MEGA I/25, S. 232). 즉, 서유럽dml 자본주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역사적 환경·조건이 결여되어=되면 러시아의 농경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변혁적 힘은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농경공동체가 “이 생산[자본주의적 생산]의 가공할 유위전변有為轉變을 거치지 않고도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MEGA I/25, S. 220). 고도의 생산력에 기초한=기반한 물질적 조건들이나 신사회를 주체를 갖지 않는 농경공동체 그 자체에는 자본주의보다도 고차적인 사회로 직접 이행할 힘이 없다. 고차적인 사회 형태로의 [이행의] 원동력은 당시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내부에 있으며, 그 환경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이 답변의 개요이다.

그 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는 자수리치에게 보낸 서한에

서 러시아의 농경공동체의 내용은 ‘특수연구’(MEGA I/25, S. 241)라고 명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지만, 『자본』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확립된 사회(당시의 서유럽 국가들)<sup>11)</sup>를 모델로 삼은, “자본의 일반적 연구·분석”인데 반해, 러시아의 공동체나 그 역사를 둘러싼 연구는 어디까지나 ‘특수 연구’에 속한다.<sup>12)</sup>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자본』에 나타난 분석은 농촌공동체의 생명력에 대한 찬반양론의 어느 논거에 대해서도 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MEGA I/25, S. 241)며, 그 “숙명성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찬반양론의 어느 논거도, 자본주의 제도의 창설創成에 관한 나의 분석[『자본』의 분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MEGA I/25, S. 235)라고 말했다. 『자본』에서는 비서양 사회, 즉 비자본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를 처음부터 연구 과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수연구’에 의해 “자본의 일반적 연구·분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체의 ‘특수연구’가 『자본』의 이론이나 역사관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반대로 ‘특수연구’는 ‘일반적 연구’가 있어야 비로소 자리매김된다=위치를 잡는다. 위의 문제에서도 『자본』에서의 “자본의 일반적 연구”를 통한, 자본주의의 태내에 있는 새로운 사회의 물질적 조건들

11) 마르크스는 프랑스어판 『자본』을 인용하면서 제11부에서의 ‘역사적 숙명성’은 “서유럽 국가들에 명시적으로 한정”(MEGA I/25, S. 241)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테체스크벤누이에 자피스키오테어체스토벤노이에·자피스키』 편집부 앞으로 보낸 서한(1877년 11월)에서도 “본원적 축적에 관한 장은 서유럽에서 자본주의적 질서가 봉건적 경제질서의 태내에서 생겨난 길을 추적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EGA I/25, S.115)라고 논하고 있다.

12) 물론 필자는 모든 발췌노트나 서한의 내용이 반드시 ‘특수연구’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공동체의 연구가 ‘특수연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나 주체의 분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는 러시아 공동체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특수 연구)할 수 있다. 연구영역의 구별을 간과하면 무자각적으로 ‘특수연구’를 ‘일반연구’로 슬라이드시켜=밀어붙여 마치 전자야말로 일반적인 테제인 것처럼 관념하고=관념화하고 『자본』에 수정을 강요한다는 전도가 생긴다.

이상의 것으로부터도, 『자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발췌 노트나 서한에는 어떤 공동체 등의 기술을 하나의 근거로, 『자본』을 발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미완의 책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일반적 연구’와 그 외부에 있는 ‘특수 연구’ 사이의 구별을 자리매김하지=규정하지 않고 후자를 테제화했기 때문에 생겨난 사고방식이다. 무엇보다, 반대로 말기의 『자본』 초고에서는 상술되어 있는데, 발췌 노트나 서한에는 적혀 있지 않은 내용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발췌 노트는 몰이론적이라든가 메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이다. 양자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이루는 『자본』의 연구영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자본』과 현대

『자본』 출간 150년을 맞은 지금, “『자본』은 이미 낡았다”라는 주장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새로운 현상에 가장 먼저 눈이 가고, 그 현실적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형으로서 널리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단계’적 파악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단계’가 바뀌었으니, 『자본』은 ‘낡았다고 생각하고, 그 의의를 부정 내지 상대화하는 지향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레닌(Lenin 1917[2010])이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독점 단계’로 규정하고 힐퍼딩(Hilferding 1910[1968])이 『자본』을 자유경쟁 단계의 저작으로 자리매김한=규정한 이후, 단계적 파악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상식이 되었다.

마르크스파의 대다수는 현대 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변질’됐다며 독점자본주의 단계 이후에도 국가독점자본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금융화 자본주의, 디지털자본주의 단계 등 단계에 단계를 덧붙인다. 이렇게 다양하게 유형화된 ‘단계 모델’이 생겨났고, 그들은 새로운 ‘단계 규정’을 하는 것을 일삼게 됐다. 이는 우노파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통파와 서구 마르크스파에서도 공통적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타당한 것은 ‘자유경쟁 단계’에 있던 19세기 동안뿐이고, 그 후에는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현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3)</sup> 마르크스파 내에 마르크스의 오늘날적=동시대적 타당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접근법이 확산되고 있다.

13) 전형을 꼽자면, 井村(2016:1-3)는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를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현대 자본주의는 ‘일대변질’을 이룩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일반의 기본법칙을 해명한 K마르크스 『자본』 같은 이론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서구권에서도 예로부터 비슷한 사고방식이 뿌리 깊으며, 가령 『멘슬리 리뷰』의 중심인물이었던 바란과 스위지는 자본주의가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이윤율 저하 법칙을 잉여 증대의 법칙으로 대체해야” 한다(Baran and Sweezy 1966:72), 즉 단계가 변화했으니 법칙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의 법칙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서구에서는 예외적으로 클라이먼(Kliman 2016)이 사실상의 단계론 비판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마르크스의 경제이론과 ‘현대’는 분열된=갈라져 있는 것일까? 또 애초 자본주의의 ‘단계’적 파악은 마르크스의 방법과 정합적인 것일까? 아니다. 『자본』의 주제는 경제현상의 기술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법칙 내지 그 본질적 관계들의 해명에 있으며, 거기서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이의 특수성이 아니라 그 동질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은 바로 현대와 공통의 토대를 갖는다. 그 이론은 때때로 바뀌는 현상을 넘어 자본주의 현실 분석에 불가결한=필수적인 틀을=도구를 제공한다. 자본주의가 대부분의 나라를 뒤덮고 있는 오늘날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한 마르크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단계적 파악이 널리 퍼져=보급되어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마르크스의 『자본』은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아무래도 없애기 어려운 통념이 배경에 있다. 그러나 『자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것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은 금세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 제1부 초판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저작[『자본』]에서 내가 연구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것에 대응하는 **생산관계들** 및 **교역관계들**이다. 그 전형적인 장소는 지금까지는=오늘까지는 영국이다. 이것이야말로 영국이 나의 이론적 전개的主要 예증으로서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법칙으로부터 생기는 사회적 적대관계의 발전도의 높고 낮음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칙 자체, 철의 필연성을 갖고

서 작용하고 자신을 관통하는 이 경향이 문제인 것이다. ...  
 현대(modern)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파헤치는=폭로하  
는 것이야말로 이 저작의 최종 목적이다.(MEGA II/5, S.12-14  
 [12-16])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것에 대응하는 생산관계들 및  
 교역관계들”, 이 사회의 “법칙 자체”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란 영국이라는 특정한 국가의 그  
 것이 아니다. 그는 영국<sup>14)</sup>을 『자본』에 있어서의 “이론적 전개的主要  
 예증”이라고 규정하고=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본』을 구체적으로 보  
 더라도 영국은 이론적 분석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장소”의 “주요  
 예증”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  
 1부 제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을 전개할 때 영국에 대  
 해 말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의 예  
 증”(MEGA II/6, S. 590[677])으로서였다. 제1부 제24장 「본원적 축적」  
 에서도 “그것[본원적 축적]이 전형적인 형태를 취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영국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국을 예로 든다”(MEGA

14) 마르크스는 『자본』 제1부 출간 이후인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발전이 두드러  
 진 미국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졌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1878년 11월 15일  
 다니엘슨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영역은 이제 분명히  
 미국에서 ... 발견된다”(MEW 34, S. 359)라고 말했고, 1881년 2월 19일 마찬가지로  
 다니엘슨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각국, 특히 미국에서 내게 보내온 청서류靑書類  
 [관공서 자료의 간행물]를 연구해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며, 그 결과 내가  
 작업하는 시간은 과업[본래 직업인 『자본』의 완성을 이루는 데에는 거의 불충분합  
 니다“(MEW 35, S. 15)라고 말한다. 마르크스가 점차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Sylvers(2005), Roth(2009)가 강조하여 논하고 있다.

II/6, S. 6461744))라고 한다. 제3부 주요 초고에서도 “영국에서는 다름의 여지 없이 현대사회(die modern Gesellschaft)가 그 경제적 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전형적으로 발전하고 있기”(MEGA II/4.2, S. 902) 때문에 그것이 취급된다. 즉, 마르크스는 어느 특정한 국가나 장소의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확립되어 있는 국가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되는 “자본의 일반적 분석”(MEGA II/4.2, S.305),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연구”(MEGA II/4.2, S.215)를 중심에 두었다.

이어서 마르크스는 『자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정도의 높고 낮음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는 여기서 ‘자유경쟁 단계’라는 특정한 단계의 자본주의를 밝히려 한 것이 아니다. “발전 정도의 높고 낮음”에 의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회에 공통되는, 질적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자본』이란 자본주의의 특정한 발전 국면을 테마로 한 저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론적 저작이다. 즉, 장소나 시간에 규정된 고유한 ‘단계’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는 그 동질성을 물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근대 사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라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과 ‘현대’가 분리되어 온 하나의 요인으로서 적어도 일본 국내에 국한되면 그 특유의 번역에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현대(modern)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현대(modern)사회”(MEGA II/4.2, S. 901) 등이라고 할 때의 ‘modern’은, 지금까지 ‘현대의’가 아니라 ‘근대의’로 압도적으로 번역되어 왔다. ‘현대사회’라고 해야 할 곳이 ‘근대사회’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근대사



회는 ‘현대보다 앞선 시대’라는 뉘앙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본』은 ‘현대보다 오래된 시대(단계)의 사회’를 다룬 것이라는 오해가 퍼진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현대사회(die modern Gesellschaft)’라고 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다름 없으며, 그 전의 사회를 가리킨 것은 아니었다.<sup>15)</sup> 즉, 그는 공동체의 사회나 중세의 봉건 제사회 등 선행하는 사회형태와는 질을 달리하는 사회를 준별하여 한마디로 ‘현대사회’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자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사회’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사회이다. 『자본』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매 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현대’를 읽어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3. 『자본』은 ‘미완’인가

그렇다고 해도=하지만 일부 독자는 “『자본』은 ‘미완’이기 때문에, 이것에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실제로, “『자본』은 미완이다”라고 단언하고 MEGA의 『자본』 제2부나 제3부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는 연구자가 압도적이다.<sup>16)</sup> 그

15) 이 점에 대해서는 대승(2018: 제2장)이 명료하게 논하고 있다.

16) 『자본』 제2부나 제3부의 이론적 도달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미완’을 주장하는 것은 Roth (2009), Hecker (2009), Moseley (2017), Vollgraf (2018), Dellheim and Wolf eds.(2018), Musto(2019), Trigg (2021) 등, MEGA 연구자를 포함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미완’의 의미를 불문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가 지극히 애매하다. 필자의 정리에 따르면 『자본』이 ‘미완’이라고 말할 때에는 본래 구별해야 할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구체적인 이론상의 내용을 불문하고 마르크스는 『자본』 제2부·제3부를 자신의 손으로 출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떴으며 남은 원고는 외형적, 형식적으로 볼 때 ‘미완’이라고 하는 경우다. 이 견해는 일면에서는 올바른 필자가 굳이 ‘일면에서’라고 한정된 것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한 MEGA 연구자는 ‘외형적, 형식적’인 이해에서도 중대한 사실 오인<sup>17)</sup>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미완’은 수십 년 전부터 얘기되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내용상의 전개를 수반한다면 몰라도, 마치 그것이 새로운 발견인 양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

둘째, 『자본』에 고유한 문제 설정이나 연구 영역의 한정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본』에서는 발췌 노트나 서한 등에는 쓰여 있는 공동체나 비서양 사회, 젠더 등 “OO의 연구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른바 ‘생떼’에 근거한 ‘미완론’이다.<sup>18)</sup> 그렇다고 해도=하지만 이것을

---

17)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무스토(Musto 2010:291)도 MEGA의 『자본』 제2부 및 제3부는 “완결된 경제이론을 표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것들 대부분은 발전 중에 있는 잠정적인 노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제2부나 제3부의 대부분을 ‘노트’나 ‘메모’로 간주해 ‘미완’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가 압도적이다. 왜 이런 시각이 ‘사실 오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서 제8장에서 논한다.

18) 일례를 들면 브라운(Brown 2014)은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젠더를 포괄하는 설명을 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라고 말한다. 브라운에 대해서는 클라이먼(Kliman 2016: 216-217)이 이미 같은 대목을 인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다만 클라이먼은 『자본』의 연구영역과 그 외부에

인정하면 어떤 연구서도 ‘불충분’하고 ‘미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자.

주목해야 할 것은 셋째,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자신이 설정한 이론문제에 최종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미해명의 문제를 남겼다는 의미의 ‘미완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완’을 주장할 때 적어도 마르크스가 각각의 편(篇)이나 장, 절에서 설정한 이론 문제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디까지 밝히고 어디서 논리적으로 막혔으며 왜 그 문제를 풀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당연히 『자본』의 도달점을 MEGA에 근거해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미해명의 이론문제는 마르크스가 “하나의 예술적 체계”(MEW 31, S.132)라고 부른 『자본』 총3부의 전체 논리에 연쇄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므로 그 정합성을 정밀 조사할 필요도 있다. 이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미완’을 주창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지금 말한 의미에서 본다면 비록 초고에 미정리된 기술이 남아있더라도, 검증 결과 오히려 마르크스가 자신의 문제 설정에 논리적으로 답을 주었다면 이론적으로는 ‘완성’된 것이 된다.<sup>19)</sup> 최근 ‘미완’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그 의미나 MEGA판 『자본』 총3부의 전개가 결여된 ‘MEGA 연구’가 산재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자본』을 ‘완성’된 것으로 절대화한 과거의 연구자도, 무엇을 갖고 ‘완성’이라고 말하는지는 불분명하며, 그런 한에서는 미완론자와 동질적이다.

---

남겨진 영역 사이의 구별을 반드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9) 『자본』은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 각 장, 각 절에서 한정을 둔 문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독자는 〈문제설정과 그 한정성, 해답, 의의, 이론적 연쇄〉를 세트로 읽어내야 한다.

이에 대해 본서는 ‘미완’이라고 치부되기 쉬운 『자본』 제2부·제3부에서의 자본의 유통과정·재생산론이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공황·신용론 등을 정면으로 검토한다. 그 위에서 MEGA를 정성껏 읽어 보면 — 적어도 본서의 고찰 범위에서는 — 사실 마르크스는 설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압도적이며, 그 이론의 뼈대나 의의가 선명하게 부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하든 혹은 비판하든 논의의 출발점을 이루는 기준점, 즉 마르크스 본인의 경제이론이 무엇이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본서에서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 및 최종적으로 도달한 이론적 지견을 밝힌다.

## 4. 『자본』의 방법

### 4.1 현상 형태로부터의 출발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어떤 방법<sup>20)</sup>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규명하려 했던 것일까? 그는 『자본』의 방법 자체에 대해 거의 적극적으로 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방법 그 자체라기보다는 무엇을 문제로 설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밝힐 것인가에 있으며, 방법 자체에 대해 아무리 논해도 대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방법을 미리 이해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르크스가 ‘경제학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 정리한 유일한 것

---

20) 경제학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윤](#)(2016: 제1권, 보론1)을 참조하였다.

은 『경제학 비판요강(1857-1858년 초고)』의 「서설」에 포함된 「3. 경제학의 방법」이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자본』에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방법에 대한 포인트가=요점이 응축되어 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의 경제학의 방법이란 인간의 의식 형태나 관념형태에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표상’ 내지 ‘현상 형태’로부터 분석을 개시=시작한다. “실재적인 주체는 여전히 두뇌 밖에서, 그 자립성을 가지고 계속 존립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론적 방법의 경우도 주체인 사회가 전제로서 언제든지 표상을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MEGA II/I, S. 37).

예를 들어, 『자본』의 서두에서 테마가 되는 ‘상품’이나 ‘화폐’, 후술할 ‘이윤’이나 ‘이자’ 등의 범주만 해도, 이것들은 공상도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또 평생 동안, 생산과정에서의 노동형태와 시장의 교란을 수반하는 공황 등을 주시하며 『자본』에서는 이것들에 대해 논하는데, 이것들도 역시 이데올로기 등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다. 마르크스는 ‘이념’이나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념’이나 ‘개념’에서 출발하는 철학과는 대극을 이룬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최고 말년에 바그너를 비평하고(1879년 후반~1880년 11월), 『자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개념’에서는, 따라서 ‘가치개념’에서도 출발하지 않았다 … 나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생산물이 취하는 가장 단순한 사회적 형태이며, 그리고 이것이 ‘상품’이다. 나는 그것을 분석한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현상하고 있는 형태에서 분석한다”(MEW 19, S. 368-369)라고 하며, “인간 그 자체에서 출발하

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주어진 사회시대에서 출발하는 나의 분석적 방법은 개념을 조합하는=반죽하는 교수식의 독일적 개념결합의 방법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MEW 19, S. 371)라고 말한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표상으로서 주어진 현상 형태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 그것은 『자본』에서 관통되어 있다.

이리하여 마르크스는 입수 가능한 당시의 방대한 통계자료와 보도, 기록과 역사 등의 재료를 허락하는 한 조사하여 눈앞의 현실을 파헤치는=드러내는 것에서부터 경제학 연구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대영박물관에 퇴적되어 있는 경제학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부르주아 사회의 관찰에 대해 런던이 가지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 완전히 처음부터 [경제학의 연구를] 다시 하고, 새로운 재료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결의”(MEGA II/2, S.102)한 이후의 일관된 태도이다.

#### 4.2 현상과 본질 : 분석과 전개

그렇다면 현상 형태를 전제로 분석을 진행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르크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한 나라를 경제학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에는, 우리는 그 나라의 인구, 그 인구의 계급들로의 배분, 도시, 농촌, 해양, 다양한 생산 부문, 수출입, 연도별 생산과 소비, 상품 가격 등에서부터 시작한다. / 실재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즉 현실적인 전제에서부터, 따라서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생산행위 전체의 기초이자 주체인 인

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 만약 내가 인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체에 대한 혼돈의 =혼란스러운 표상일 뿐이고, 좀 더 들어간=세세한 규정을 부여함으로써, 나는 분석적으로, 점점 더 단순한 개념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표상된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더 희박한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 마침내 가장 단순한 규정들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번에는 다시 후방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어야 하며=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다시 인구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체에 대한 혼돈=혼란스러운 표상으로서의 인구가 아니라 많은 규정들과 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진 풍부한 총체로서의 인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MEGA II/1.1, S. 35-36)

마르크스의 경제학의 방법은 우선 “표상된 구체적인 것”에서 ‘분석’에 의해 ‘추상적인’ “가장 단순한 규정들에 도달”하는 길을 걷는다. 이것이 다음 인용에서 ‘제1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하향의 길’이다.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현상 형태의 심층에 있는 본질적 관계들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 그 위에서 이번에는 “추상적 규정들이 사고의 길을 따라 구체적인 것의 재생산을 향해 나아가는” 길, 즉 ‘제2의 길’로 일컬어지는 ‘상향의 길’을 걷는다. 즉, 본질이 어떻게 현상하는지를 전개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혼돈의=혼란스러운 표상”이 아니라 “많은 규정들과 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진 풍부한 총체”로서의 현실에 도달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계속해서 말한다.

제1의 길은 경제학이 성립할 무렵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이다. …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분석에 의해 분업, 화폐, 가치 등과 같은 몇 가지 규정적인 추상적·일반적 연관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났다. 이러한 개별적인 계기들이 많은 적든 확정되고 추상되어 버리면 … 단순한 것에서부터 … [구체적인 것으로] 상향하는 경제학의 체계들이 시작되었다. 이것 이후가 분명히 학문적으로 더 올바른 방법이다.

구체적인 것은 그것이 다수의 규정들의 총괄이며, 따라서 다양한 것의 통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것은 그것이 현실의 출발점이며, 따라서 또한 직감과 표상과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있어서는 총괄의 과정으로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출발점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제1의 길에서는 완전한 표상이 증발되어 추상적인 규정이 되었지만, 제2의 길에서는 추상적인 규정들이 사고의 길을 따라 구체적인 것들의 재생산을 향해 나아간다. (MEGA II/1.1, S. 36)

‘제1의 길’이 “경제학이 성립할 무렵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이고, ‘제2의 길’은 그 후에 시작된 “상향하는 경제학의 체계들”이다. 과연 고전파 경제학도 구체적인 것을 분석하여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며 그런 한에서는 하향의 길(제1의 길)을 걸어가기에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르크스와 달리 분석을 통해 “종종 중간항 없이 직접 환원을 하려고 하고, 다양한 형태의 원천들의 동일성을 증명하고자 한다”(MEGA II/3.4, S. 1499). 즉, 그들은 직접적인 환원에 의해서, 상호간의 형태들



의 “내적인 유대를 찾아내는” 것이 결여되었다. 나아가 추상하고 본질을 파악한 후 서술하는 ‘상향의 길(제2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sup>21)</sup> 그러므로 그들은 예를 들어 생산가격을 가치로 환원하지만 노동에 의한 가치규정으로부터 생산가격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불일치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끊임없이 이론적 모순에 빠졌다. 가치개념에서도 그들은 가치를 노동으로 환원하기는 하지만, 노동이 직접 노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왜 이 내용[노동]이 그 형태[가치의 형태]를 취하는가 … 라는 문제를 아직까지 제기한 적조차 없었다”(MEGA II/6, S.110-111[95]). 무엇보다 그 원인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초역사적인 시스템으로서, 따라서 상품형태를 자명한 자연물로 파악한 독자적인 파악이 근거에 있는데, 이렇게 그들은 노동이 가치라는 형태를 취하는 근거를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의 방법이란 우선 ‘분석’에 의해 표상에 있는 현상형태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연관된 모멘트의 “내적 유대를 찾아내어” 본질적 관계들을 밝힌다. 그 위에서 본질적 규정들에 서부터 출발점에서 표상에 떠올랐던 ‘구체적인 것’으로 전개한다.<sup>22)</sup> 이런 것에 그의 방법의 특질이 있다.

21) 고전과 경제학 방법의 결합에 대해서는 아울러 MEGA II/3.4, S.1499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자본』 제1부에서도 『경제학 비판 요강』과 비슷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서술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연구의 방식과 구별돼야 한다. 연구는 소재의 세부 사항을 제 것으로 삼고, 소재의 다양한 발전 형태를 분석하고 이것들의 발전 형태의 내적 유대를 탐색해야=찾아내야 한다. 이 작업을 완전히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의 운동과 그것에 따라 서술을 할 수 있는 것이다”(MEGA II/6, S. 709[27]).

### 4.3 ‘하나의 예술적인 체계’

마르크스는 “내 저서[『자본』]의 장점은 그것이 하나의 예술적인 체계 (ein artistisches Ganzes)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MEW 31, S.132)라고 말했듯이, 『자본』이란 제1부부터 제3부까지의 전체를 통해, 앞서 서술한 방법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반적인 분석을 완료=완성하는 저작이었다.

『자본』의 전체를 부감=조감=조망하더라도 제1부 「자본의 생산 과정」 및 제2부 「자본의 유통 과정」에서 현상 형태의 심층에 숨어 있는 본질적인 관계들이 파악된다. 그 위에서 제3부 「자본의 총과정의 자태들(Die Gestaltungen des Gesamt processes)」 — 현행판에서는 엥겔스에 의해 제3부 제목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으로 바뀌었다 — 에서는 사람들 눈에 나타난 자본의 자태들에까지 본질적 관계들을 전개한다. 마르크스는 MEGA판 제3부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부[제3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통일’[자본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에 대해 일반적인 반성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오히려 자본의 과정 — 전체로서 고찰된 그것 — 으로부터 생기는 구체적인 형태들을 찾아내어 서술하는 것이다. {자본들의 현실적 운동에서 자본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형태들로, 즉, 이것에 있어서는 직접적 생산과정에서의 자본의 자태(Gestalt)도 유통과정에서의 자본의 자태(Gestalt)도 단지 특수적 계기들로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

는, 그러한 구체적 형태들로 서로를 마주한다=대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에서 전개하는, 자본의 다양한 형상화 (die Gestaltungen des Capitals)는 그것들이 사회의 표면에서, 생산 당사자들 자신의 일상적 의식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본의 상호 행동=작용인 경쟁 속에서 생길 때의 형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MEGA II/4.2, S.7)

『자본』 제3부의 과제는 제1부 및 제2부의 연구를 전제로 하여 “자본의 과정 — 전체로서 고찰된 그것 — 으로부터 생기는 구체적인 형태들을 찾아내어 서술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자본들의 현실적 운동”도 포함된다. 즉, 지금까지의 본질적 관계들의 파악에 근거해=파악을 바탕으로 “사회적 표면에서, 생산 당사자들 자신의 일상적 의식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본의 상호 행동=작용인 경쟁 속에서 생길 때의 형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테마이다. 이와 같이 『자본』이란 전체를 통해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표상으로부터 그 심층에 있는 본질적 관련을 파악하고 그 위에서 구체적 형태들·자태들을 설명하여 완료하는 “하나의 예술적인 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도 『자본』이란 국소적인 각론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제2부와 제3부가 빠진 『자본』 연구도 성립할 수 없다. 그것은 전체 3부의 토탈적인=총체적인 파악이 있어야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5. 경제학 비판

## 5.1 ‘비판’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무엇이 『자본』에서 자본주의 분석을 가능하게 했을까?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학 비판’이라는 『자본』의 부제이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에서 ‘경제학 비판’이라는 퍼스펙티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 마르크스와 다른 경제학 사이의 본질적 차이도 있다. 그러나 ‘경제학 비판’의 의미가 반드시 적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 비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포스톤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르크스가 쓴 것은 경제학 비판이지, 경제학이 아니었다”(Postone 1993:26/57)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뿌리 깊다=깊게 자리 잡고 있다. 알튀세르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Althusser et al. 1965 [2014]: 363-365/230-233). 그러나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자본주의 사회]의 해부학은 경제학 속에서 찾아야 한다”(MEGA II/2, S.100)라고 확신한 이후,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의 규명에 힘썼다=써들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책을 종종 “나의 경제학”(MEGA II/2, S.102), “경제학의 작업”(MEGA III/9, S. 72), “경제학에 관한 나의 저작인 『자본』”(MEGA II/2, S. 418)이라고 부르며, 『자본』의 출판이 임박한 1863년에는 “하루에 10시간은 경제학을 전문으로”(MEGA III/12, S. 399) 하면서 “경제학을 인쇄를 위해 청서淸書한다”(MEGA III/12, S. 377)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경제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에 따르면 ‘경제학 비판’이란 무엇인가? 우선 ‘비판’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

일상감각에서 ‘비판’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에서의 ‘경제학 비판’이란 스미스나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상학파의 제

임스 스튜어트, 중농학파의 프랑수아 케네 등을 포함하는 학설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확실히 『자본』 전에 쓰인 『경제학 비판』에는 각 절의 말미에 학설 비판이 정리되어 수록되어 있다. 『자본』에서도 그때마다 학설 비판이 박혀=끼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학 비판’의 의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다. 한눈에 봐도 『자본』은 처음부터 다양한 경제학설과 논쟁문제 자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것들을 비판하는 서술 스타일을 취하지 않는다.<sup>23)</sup>

주의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비판’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좁은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에게 ‘비판’이란 눈앞의 표면적 경제사회의 현상들을 자명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대상의 본질에 해당하는 존립 근거를 찾아내고 그 위에서 그 현상을 재파악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마르크스가 “분석적 방법은 비판과 이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최초의 방법이다”(MEGA II/3.4, S.1499)라고 말했듯이, 그는 현상 형태 속에서부터 본질적인 관계들을 의식적으로 포착=파악하는 분석적 행위를 ‘비판’의 ‘최초의 방법’(제1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판’이란 본질적 관계들의 파악에 기초하여=파악을 바탕으로 현상 형태를 서술하는 행위(제2의 길)도 포함하고 있다. 요컨대 마르크스는

---

23) 엥겔스는 『경제학비판』의 서평에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서 같은 저작에서는, 경제학에서 개별 장을 떼어내어 단순히 비판을 덧붙이거나 경제학적인 이런저런 논쟁 문제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본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잡한 경제과학 전체의 체계적 총괄이며, 부르주아적 생산 및 부르주아적 교환의 법칙들의 맥락 있는 전개이다… 이 전개는 동시에 경제학의 문헌 전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MEGA II/2, S. 250).

현상 형태의 심층에 있는 본질적 관계들(내적 유대)을 파악하고 그 위에서 매개적으로 현상 형태를 설명, 서술하는 행위를 ‘비판’이라고 부른 것이다.

## 5.2 경제적 범주(경제적 형태 규정성)에 대한 비판

그렇다면 ‘비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 대상은 ‘경제학설’ 그 자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우선 ‘경제적 범주’에 있었다.<sup>24)</sup> “새로운 여러 가지 형태 규정성(범주)”(MEGA II/4.1, S.141)과 같이, 경제적 형태 규정성이라고 바꿔도 된다. 마르크스는 “소재에 대한 격렬한 관심 때문에 형태의 차이에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제학 개설서”(MEGA II/6, S. 505[565])를 비판하고 형태 규정 내지 범주를 문제 삼았다. 사실 『자본』에서는 경제학설을 차례차례 비판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 범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sup>25)26)</sup> 『자본』이 ‘상품’과 ‘화폐’

---

24) 이 점을 명료하게 자리매김하고 전개한 것은 [久留間](#)(1957) 및 그의 편집(1968-1985)에 의한 일련의 의 연구이다. 그의 연구는 경제적 범주 내지 경제적 형태 규정의 내면을 파헤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해명에 접근한, 최고 수준의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학 비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합해서 [久留間](#) 편집(1969)에 수록되어 있는 「마르크스 경제학 사전의 책갈피 No.3([マルクス経済学レキシヨンの葉 No. 3](#))」에서 논하고 있다.

25) MEGA에 따르면 『자본』의 핵심은 ‘소재’가 아니라 ‘경제적 형태규정성’ 혹은 ‘경제적 범주’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존립근거 및 그 모순을 해명하는 데 있다. 본서에서 후술할 ‘후기·말기 마르크스’에 해당하는 MEGA의 『자본』 제2부 제5고~제7고의 자본순환론, 제8고의 재생산론(본서 6장 참조)을 보더라도, 혹은 『자본』 제3부 초고의 이윤과 이자, 화폐자본(monied capital), [가상자본架空資本](#) 등의 고찰을 보더라도 경제적 범주의 분석이 기본 축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본서 7장, 8장 참조).

라는 경제적 범주에서 시작하여 ‘자본’으로 고찰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에서도 그것은 명백하다. 마르크스는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작업은 경제적 범주들의 비판이다. 혹은 부르주아 경제[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비판적 서술이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시스템의 서술인 동시에 서술에 의한 시스템의 비판이기도 하다.(MEGA III/9, S. 72)

이 인용은 마르크스가 『경제학 비판』 집필 중에 쓴 것인데, ‘경제학 비판’이란 본질적으로 “경제적 범주들의 비판”임을 가장 적절하게 말해 준다. 경제적 범주의 비판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나 종래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실현하기 위한 중추를 이룬다.

나아가 마르크스의 범주 비판이란 부르주아 경제의 ‘시스템의 서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의 부르주아 경제의 “서술을 통한 시스템의 비판”을 의미했다. 즉,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를 체계를 세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부르주아 사회의 역사적 제한성과 모순을 그려내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총체적 비판을 꾀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경제적 범주’란 무엇인가?

---

26) 참고로 ‘경제적 규정성’을 “『자본』의 새로운 읽기 방식”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하인리히(Heinrich 2012)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적 규정성’에 주목하는 것 자체는 본래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인리히와 필자의 견해에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수없이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서 제5장~제8장에서 지적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경제적 범주들은 사회적 생산관계들의 이론적 표현, 그 추상”(MEW 4, S. 130)이며, “범주들은 이 일정한 사회의, 이 주체의 경제형태들定在諸形態, 실재규정들實在諸規定의 표현”(MEGA II/1.1, S. 41)이다. 가령 ‘상품’이라는 범주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사회적 생산관계에 의해 노동생산물에 ‘상품’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성격이 고착된 형태에 다름 아니다. 그런 한에서는 ‘자본’도 마찬가지다. “오직 일정한 관계들 하에서만 그것은 자본이 된다. 이 관계들에서 분리되면 그것은 자본이 아니다. 마치 금이 그 자체로는 화폐가 아니고 설탕이 설탕 가격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 자본은 하나의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생산관계이다”(MEGA II/6, S. 685[794]). 때문에 “이러한 범주는 그것들이 표시하는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역사적인, 한 시기만의 경과적인 산물이다”(MEW 4, S. 130).

경제적 범주란 어떤 소재에 대해 “경제적 형태 규정”이 부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정이란 그들이 서로 교역관계 (Verkehrsverhältnis)에서 상대할 때 가지고 있는 규정이며, 그들의 사회적 기능의, 혹은 그들 상호간의 사회적 관련의 지표”(MEGA II/1.1, S.165)이며, “형태규정 — 대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MEGA II/1.1, S. 222)이다. 즉, ‘경제적 범주’란 독자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 어떤 대상에게 특정한 ‘경제적 형태 규정’이 부여된 형태나 다름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간단히 “형태 규정성(범주)”(MEGA II/4.1, S. 141)이라고도 썼다. 이 파악을 통해 비로소 고유한 경제현상의 가장 깊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경제적 범주 그 자체의 외면으로부터는 그 존립 근거를 이루는



사회적 관계를 직접 살펴볼=파악할 수 없다. 반대로, 그것들은 단순한 ‘소재’로서, ‘자연물’ 같은 고정성이나 영구성을 가지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시·거시경제학이 ‘상품’이나 ‘화폐’ 등의 범주 분석을 경시하는 것도, 그것들이 고정적인 보편물로서 나타나고 자명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영구적인 보편물로 전화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물론 현존사회의 심층에 있는 생산관계들이나 거기에 내재하는 모순을 해명할 수 없게 된다. 경제현상의 원인을 규명할 때에도 이론상의 여러 혼란이 초래된다.

이처럼 경제적 범주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층을 규명할 때의 열쇠가 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이란 이러한 범주 비판에 의한 “부르주아 경제[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비판적 서술”인 동시에 그 결과 가능해지는, 기존의 경제학설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의미했던 것이다.

### 5.3 경제적 범주의 중요성

그렇다고는 해도=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범주나 경제적 형태 규정을 고찰하는 것의 의의는 더욱 이미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범주 파악이 왜 중요한지, 이 이해가 부족하면 왜 자본주의 모순을 부정하는 결과나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는가, 일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전형적으로 고전파 경제학자들 — 오늘날의 미시·거시경제학 등도 마찬가지 — 은 ‘상품’이라는 독자적인 범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결여됐다. 이들은 ‘상품’을 비역사적으로 단순한 ‘생산물’(재材)로 간

주하고 양자를 혼동했다. 이렇게 상품의 존립 근거를 이루는 고유한 사회적 관계는 간과되었고, 이들은 ‘상품의 교환’을 공동체 사회나 봉건제 사회에 있던 “단순한 생산물의 물물교환”과 동일시하고 상품 생산의 특질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특유한 사회적 성격 까지도 버렸다. 따라서 이들이 취급하는 사회는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도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생산물의 물물교환을 전제로 한 사회와 끊임없이 혼동됐고, 그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해야 비로소 나타나는 상품의 전반적인 과잉생산(공황)은 부정됐다. 이는 고전파가 이른바 ‘세이의 법칙’을 채택한 데서도 명백하다. 그들은 ‘상품’을 단순한 ‘생산물’로, 자본주의 사회를 그 전의 사회로 해소함으로써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도 씻어버린 것이다(자세한 것은 본서 제2장에서 파고든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화폐’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고전파에게 화폐란 단순한 ‘구매수단’ 혹은 생산물의 ‘유통매개물’에 불과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화폐는 최종적으로 ‘구매’로 향하므로 화폐가 공급되면 생산물에 대한 그만큼의 구매 수요가 생기고 공급된 모든 생산물에 대해 필연적으로 판로가 열린다. 이렇게 해서 ‘세이 법칙’이 초래되고, 화폐가 매개된 후의 결과만 놓고 보면 생산물과 생산물이 교환된 셈이 되며 ‘화폐 배일관’도 도출된다. 더욱이 화폐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구매 수단’이 되므로 화폐량을 증대시키면 그만큼 상품 수요가 형성되고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화폐수량설). 뒤집어 말하면 디플레이션이나 불황기에서의 수요감소는 화폐량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논리와 맞물려=논리로 연결되며 화폐가 적절히 공급되면 수요가 창출돼 불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적절히 공급하면 자본주의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속설도 유포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근거에는 ‘상품’이나 ‘화폐’ 등 분석의 불철저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범주의 의의를 공유하기 위한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sup>27)</sup> 무엇보다 ‘자본’주의 경제의 해명에 있어서 ‘자본’의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가 집요하게 경제적 범주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최근에는 마르크스파를 포함하여 경제적 범주를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적어도 그것은 마르크스의 경제이론과는 본질적으로 별개이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경제적 범주를 파악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규명하기 위한 결정적 토대이며, 바로 거기에 그의 ‘경제학 비판’의 중요성=핵심이 있다.

## 6. 경제이론과 역사파악

### 6.1 역사 파악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의 또 다른 버팀목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확립한 ‘새로운 유물론’에 기초한=입각한 역사 파악, 이른바 ‘유물사관=역사유물론’이다. 물론 『자본』은 경제이론의 저작이지만 그의 경제이론과 역사파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것일까?

대비적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스미스, 리카도 등 고전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미시·거시경제학과 포스트 케인스파만 해도 이들의

27) ‘상품’ 및 ‘화폐’에 대해서는 본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다시 한 번 들어간다.

역사 과학의 공통성은 자본주의를 영구히 이어지는 절대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이 역사 과학은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귀결을 가져왔다.

이들은 이 사회시스템이 항구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상품이나 화폐, 자본 같은 범주의 존립 근거를 특수역사적인 생산관계들로부터 묻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이 범주들은 자명시되었고, 그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왜, 무엇에 의해”(MEGA II/6, S.120[107]) 산출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보편화함으로써 이 사회에 있는 ‘모순’을 일소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자본주의 속에 이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계기가 내재되어 있고, 그 견고한 영접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서는 자본주의에 ‘불균형’은 있어도 가격 메커니즘이나 새로운 정책, 제도의 구축에 의해 그때마다 그것은 클리어할=해소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라는 데 역점이 놓여 있다. 마르크스와 친화성이 있는 것처럼 취급될 수 있는 포스트 케인스파의 ‘불안정성’이나 ‘불확실성’만 해도 ‘모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로부터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촉발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멘트를 도출할 수 없다. 이들의 경제학은 “인류 역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이다”라는 특이한 역사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과학에 힘입은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 제1부에서 “경제학자들은 하나의 기묘한 행동 방식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는 단 두 종류의 제도가 있을 뿐이다. 인위적 제도와 자연적 제도. 봉건제의 제도는 인위적이고 부르주아지의

제도는 자연적이다. ...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은 없는 것이다”(MEGA II/6, S.111[96])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경제학에도 고스란히 들어 맞는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파악은 대극에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역사 파악은 어떠한 사회 시스템도 영구적이지 않고 역사적이며, 생성·발전·소멸이라는 변화의 발걸음을 걷는다는 것이다. 이 역사 파악이야말로 자본주의에 고유한 본질적 관계들과 함께 거기에 내재된 모순을 포착하고 전개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 6.2 노동을 기초로 하는 사회파악과 노동의 사회적 규정

그렇다고 해도=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역사 파악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그 비판은 그의 파악을 ‘예언’, ‘이데올로기’, ‘규범’, ‘교조’, ‘유토피아’로 간주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자칭 ‘사회주의 국가’와 마르크스가 말한 신사회를 동일시하고 그 파악을 부정하는 견해도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적지 않다.<sup>28)</sup>

그러나 마르크스의 역사 파악은 자본주의는 도의(道義)나 이념에 반하고, 사회주의는 그것에 합치=부합하므로 전자를 폐지하고 후자를 실현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것으로는 있을=규범적일 수 없다. 혹은 자본주의도 발전하면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것도 아니다. 그의 역사 파악은 그것들과는 반대로 일관되게 현실 분석에 뿌리

28) 필자는 구소련 국가들을 포함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국가 자본주의’로 규정하기에 적합한 사회였다고 생각한다. ‘국가 자본주의’는 차토파디아이(Chattopadhyay 1994)나 대승(2011)에 의한 규정이다. 마르크스의 어소시에이션론에 대해서는 본서 제10장에서 다룰 것이다.

를 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확립되고 발전한 것은 200여 년에 불과하며, 그 전의 역사의 대부분은 완전히 다른 사회 형태이며 영구적인 사회 따위는 하나도 없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만 도출된 것도 아니다. 그것도 전제<sup>前提</sup>적인 사실로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르크스의 역사 파악의 본질적 특징은 역사의 변화 혹은 발전의 가장 깊은 기초를 현실에서 행해지는 특정한 ‘노동’으로 귀착시킨 점에 있었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전제들은 결코 자의적인 전제들도 교조도 아니며, 그것은 공상 속에서만 도외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전제들이다. 그것은 현실적인 개인들, 그들의 행동 및 그들의 물질적인 생활 조건들, 눈앞에서 발견된 생활 조건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생활 조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는 순전히 경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모든 인간사의 첫 번째 전제는 물론 살아있는 인간적 개인들의 존재이다. 따라서 확인되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 개인들의 신체적 조직 및 그것에 의해 부여되는, 그 밖의 자연에 대한 그들의 관계이다. ... 모든 역사 기술은 이러한 자연적 기초로부터, 그리고 역사의 경과에서의 인간의 행동에 의한 그러한 변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MEGA I/5, S. 8)

여기서 마르크스는 “자의적인 전제들도 교조도 아니며” 객관적인 사

실로서 있는, “살아있는 인간적 개인들의 존재”를 “인간사의 첫 번째 전제”로 삼고 있다. 인간 개인들의 존재 없이는 인간의 역사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 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 생활 조건들”을 산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존재에는 생산행위, 즉 노동을 매개로 자연을 변형시켜 생활수단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조건지어져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든 역사 기술은 이러한 자연적 기초로부터, 그리고 역사의 경과에서의 인간의 행동에 의한 그러한 변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한다. 조금 더 들어가자.

우리는 무전제<sup>無前提</sup>적인 독일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적 존재의, 따라서 또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전제, 즉 인간들은 ‘역사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히 음식, 주거, 의복, 그리고 더 나아가 그밖의 몇 가지이다. 따라서 첫 번째의 역사적 행위는 이것들[음식, 주거, 의복, 기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들의 산출, 물질적 생활 자체의 생산이며, 더구나 이것은 인간들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도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시각각 행해져야 하는 역사적 행위, 모든 역사의 근본 조건이다. … 따라서 모든 역사적 파악에 있어서의 첫 번째 것은, 이 근본적 사실을 그 의의 전체와 그 확대 전체에 있어서 고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은 취급을 하는 것이다.(MEGA I/5, S.26)

“모든 역사의 근본조건” 혹은 “근본적 사실”이란 인간들은 어떤 사회에서도, 역사가 존속하는 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변형 가공하여 끊임없이 생활수단을 생산하고, 즉 노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물질적 생활 자체의 생산”이며, “첫 번째의 역사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생산 혹은 노동은 물질적 생활을 위한 조건이며 인간의 생존 조건이다. 무엇보다 마르크스는 『자본』 제1부에 대한 서평을 비평하면서도(1868년 7월 11일 쿠겔만에게 보낸 서한), “어떤 국민이라도 1년은 고사하고 2, 3주라도 노동을 중지하면 망한다는 것은 어떤 어린이도 알고 있습니다”(MEW 32, S. 552)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견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서 전제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은 생산수단에 대한 특정한 관계에 기초한 생산행위이며, 생산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인간은 고정적이거나 정태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활수단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욕구들’도 산출한다. 즉, 역사적 행위의 “두 번째 것은 충족된 최초의 욕구 그 자체, 충족의 행위 및 이미 획득된 충족의 용구가 새로운 욕구들을 가져온다”(MEGA I/5, S. 27)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동일한 욕구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생산한 생산물에 의해 새로운 욕구를 자극하고 새로운 물질적 생산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역사적 행위의 세 번째는 인간은 생산된 생활수단을 기초로 삼아=바탕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생산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역사적 발전 속에 파고드는 세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만들고 번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 남편과 아내의, 부모와 자녀



의 관계, 가족. 처음에는 유일한 사회적 관계인 이 가족은 나중에 증대된 욕구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산출하고, 또한 증대된 인간의 수가 새로운 욕구들을 산출할 때, 종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된다”(MEGA I/5, S. 28). 인간은 생활수단의 생산을 토대로 ‘새로운 생명’을 생산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생산력’도 손에 넣는다=얻는다.

이러한 역사를 만드는 현실적 계기들 — 노동에 의한 물질적 생활의 생산, 새로운 욕구의 생산, 자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의 생산—이란 이데올로기 등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부터, 또 최초의 인간들 이래, 동시에 존재해 왔으며,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측면 … 세 가지 ‘계기’”(MEGA I/5, S. 28)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는 반드시 일정 수의 개인들의 ‘협동’(MEGA I/5, S. 29) 속에 존재하며, 인간은 어떤 생산력의 발전단계에 조용한 고유한 사회적 생산관계를 맺어 왔다. 나아가 인간의 의식형태도 이러한 특정한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역사의 기초를 현실의 생활과정에서 분리된 이데올로기나 의식형태로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생활과정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변화시키는 생산 내지 노동에 귀착=귀속시킨 것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규정된 개인들의 특정한 생산 행위에 생활 과정의 존립 근거가 있으며 역사 변화·발전의 원동력이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의 노동을 결코 초역사적 혹은 보편적인 ‘노동 일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은 역사상의 각 사회 속에서 어떤 고유한 목적과 방법으로 행해지며, 독자적인 사회

적 성격 혹은 사회적 규정성을 띠고 있다. 노동의 사회적 형태에 따라 각 경제 시스템은 질적으로 구분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적 계정勘定 하에 사사로운 일私事로=사적으로 행해지는 ‘사적 노동’인 동시에 ‘임노동’이라는 특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존립하는 본질적인 원인起因은 노동자들이 ‘임노동’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 그 기초는 임노동”(MEGA II/11, S. 333)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고 자본가의 지휘·감독 아래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 즉 ‘임노동’을 자명한 것으로 수행하고 있다. 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행위 또는 행동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라서 또한 상품이나 화폐, 자본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의 존립 근거가 있다(본서 제4장에서 상술한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의 변혁이란, 노동하는 개인들의 특정한 노동의 방식이 바뀐다는 데 요체가 있다.

## 7.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

### : 그것이 개인들에게 어소시에이션을 촉구한다

그렇다면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이행은 어떻게 초래될까? 긴요=중요한 것은 고유한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생산관계와 모순을 일으키고, 모순의 현출=출현이 사람들에게 현존사회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식, 사회변혁을 향한 의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생산력들의 발전과 생산관계가 일치하고 양자의 모순이 나타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사회의 생활과정과 생산조건들은 개인들의 자기활동의 발전의 조건이며 그들에게 외적인 것은 아니다.<sup>29)</sup> 스미스와 리카도 등이 살았던 시기는 바로 이런 시기에 조용=해당한다. 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은 모순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데 현실적인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농학과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에도 자본주의가 자연적, 조화적, 영겁적인 사회로 비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이들의 사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자본의 생산력은 그 생산관계와는 양립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이 사회의 제한성은 ‘모순’의 출현에 의해 드러난다.

처음에는 이 모순은 “우연적인 질곡으로서 나타날”(MEGA I/5, S.103) 뿐이다. 그러나 “사회적 물질적 생산력들은 그 발전의 어느 단계에서 그 내부에서 사회적 물질적 생산력들이 거기까지 운동해 온 기존 생산관계들과 혹은 그것의 법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들과 모순되게 된다. 이러한 관계들은 생산력들의 발전형태들에서 질곡으로 전회된다. 그때 사회혁명의 시기가 시작된다”(MEGA II/2, S.100-101). 이렇게 외면화하는 모순은 서서히, 어떤 때는 급속히 이 사회시스템의 제한성 혹은 질곡으로서 사람들 앞에 다가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의식형태를 산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변혁을 향한 의식은 계몽이나 선동에 의해 초래되는 이데올로기나 관념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에서 산출된다. “변혁의 시기를 그 시기의 의식으로부터 판단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의식을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로부터,

---

29) 이 문장은 마르크스의 MEGA I/5, S.102-103의 기술에 대응한다.

사회적 생산력들과 생산관계들 사이에 현존하는 충돌로부터 설명해야 한다”(MEGA II/2, S.101).

전형적으로 모순은 ‘공황=위기(Krise)’ — “모든 모순의 집합적 폭발”(MEGA II/3.3, S.1154)로 표면화됐다. 공황은 직접적으로는 이윤율의 급락이나 금융위기, 임금 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드러난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으로 가득 찬 운동은, 실제적인 부르주아에게는 현대산업이 통과하는 주기적 순환의 국면전환 속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 국면전환의 정점이야말로 일반적 공황이다”(MEGA II/6, S. 709[28]). 오늘날에도 모순은 세계공황·금융위기나 장기정체(저성장), 격차확대나 노동조건 악화, 환경파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일방적으로 ‘이윤확대’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인간생활의 향상과 풍요로운 자연을 향유하는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자신이 이 사회의 제한성을 사람들의 눈앞에 들이대고 새로운 변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생산 형태의 모순들의 발전은 그 해체와 새로운 형성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역사적 길이다”(MEGA II/6, S. 467[1512]).

이와 같이 이하 본서에서 파고드는 ‘모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생명선이다. 다만 그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가 변혁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멈추고, 이미 이룩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되돌아와서는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고, 자신이 처음

에 한 노력의 어중간한 점, 약한 점, 허술하 점을 가차없이=인정사정없이, 철저히 비웃는다. 이 혁명이 적을 던져도, 그 적은 대지로부터 새로운 힘을 빨아들여 전보다 더 거대한 모습으로 되어 일어나며, 혁명에 제동을 거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혁명은 자신이 세운 목적이 막막하고 거대한 것에 놀라서 자꾸만 뒷걸음질치게 된다.(MEGA I/11, S.101-102)

위의 서술은 1852년에 집필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로부터의 인용인데, 마르크스는 초기부터 자본주의의 강인성을 강하게 의식했음이 명백하다. 후기에 쓴 『프랑스 내란=내전』(1871년)에서도 “보다 고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헤쳐나가 환경과 인간을 다시 만드는=재구성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MEGA 1/22, S.143)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르크스를 ‘공황혁명론자나 ‘공핍화 혁명론자’, ‘낙관론자’로 보는 시각은 전쟁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그는 그런 논자가 아니었으며, 사회변혁에는 장기적인 끈질긴 투쟁과 새로운 사회의 현실적 조건들의 형성이 불가결하다고=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변혁은 법령이나 이데올로기, 선동 등으로 자의적으로 실현될 수도 없다. “그 사회[자본주의 사회]는 자연적 발전의 단계들을 뛰어넘을 수도 법령으로 제거할 수도 없”으며, “하나의 사회구성은 모든 생산력들이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지 않으면 결코 붕괴되지 않으며, 또 새로운

고도의 생산관계들은 그 물질적 존재조건들이 낡은 사회[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태내에서 부화하기 전까지는 결코 낡은 것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인류는 항상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자신에게 제기한다. ... 과제 그 자체가 그 해결의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현존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것이 생성의 과정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MEGA II/2, S.101). 사회변혁은 그 사회의 태내에서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고 모순이 현출=출현할 때마다 단련된 새로운 사회의 주체와 물질적 조건들이 성숙하지 않고서는 현실이 될 수 없다. 본서 제 10장에서 상세히 기술하듯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새로운 사회를 종종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장기간에 걸친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내부에 어소시에이션의 요소들이 준비되는 것이다.

## 마치며

이 장에서 논했듯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이란 (1) ‘경제학 비판’ 즉 경제적 범주의 비판에 의해 현실 자본주의 경제의 존립 근거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고유한 노동(임노동)에 있음을 밝혀낸=파악한 후, (2) 이 사회에 내재하고 현실에도 드러나는 모순을 전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표상에 나타나는 경제적 범주가 왜, 어떻게 성립하는지, 또 현존 사회 시스템의 모순이나 대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열쇠이다. (3) 동시에 이 파악을 통해 현존 사회가 산출하고 있는 신사회(어소시에이션)의 주체나 현실적 조건들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하다. 이러한 건

지가 결여된 것은 ‘마르크스적’으로는 보였다 하더라도 마르크스 본인의 경제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후속 장들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에센스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였다.